

## 남북경협과 하나의 시장 형성 방안

조동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 jo@ewha.ac.kr

2018년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한 해였다. 남북정상회담은 세 차례나 열렸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들 앞에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연설하는 역사적인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다. 6월에는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도 성사되었다. 물론 최근 10월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합의,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을 고려할 때 다시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만약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해제된다면 남북경협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핵을 포기하기로 한 북한, 경제 건설에 충력을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한 북한, 개방·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남북관계와 그 관계하에서 논의되었던 경협의 틀을 뛰어 넘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경협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킴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변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단순히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협을 통해 설정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이용해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는 하나의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가계소득 중 70~90%는 시장경제활동에서 얻는 수입이고, 가계의 70% 정도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시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밑으로부터의 시장화’는 북한의 경제구조를 시장의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사실 현재의 북한은 사회주의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시장화(marketization)가 진전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를 활용하면서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까지를 염두에 둔 경험 방안의 모색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남북경협이 남북 양자 간의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화라는 북한경제의 내부 변화도 전략적 고려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북한의 시장화는 양적으로는 크게 진전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북한경제의 화두는 시장의 확산으로서 공식 시장만 460개가 넘으며, 소위 간이시장이나 메뚜기 시장까지 더하면 그 수가 공식시장의 몇 배에 이를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다 보니 ‘돈주’라 불리는 자본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변동에 적응해가고 있으며, 중앙집권적인 전통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점차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확대와 시장활동의 증가가 기존의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체제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북한의 시장화는 주민의 대다수가 시장 활동에 종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과거 시절로 회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제도화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제든지 북한 당국의 결정에 따라 시장 폐지 등 계획경제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가운데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이 우월한 정책 대안일 것이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시장화는 자생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며, 따라서 그대로 두어도 계속 진전되어 나갈 것이므로 굳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보다는 개입이 유용할 것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시장화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북한 시장화가 소수 권력층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거나, 타인의 처지를 무시한 채 개인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이기주의로 타락한 천민자본주의로 연결되거나, 오로지 물질적 가치가 최고이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로 진행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즉, 아무런 시장화든 시장화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전체 한민족의 한 단계 높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화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

둘째, 북한의 시장제도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시장 수, 시장 거래 및 시장활동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북한의 시장화는 앞으로 그대로 두어도 진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화가 반드시 사적 소유권의 인정,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도입 등 시장제도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시장제도화는 지연되는 가운데 지대 추구, 부정부패 등이 심화되는 시장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당연히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북한의 시장제도화가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 시장화는 북한 내부의 정치, 권력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간다면 이는 북한 권력의 연성화, 개인주의의 확산, 신뢰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형성 등 북한 정치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변화에서는 물론,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역사적 경험은 이를 충분히 입증한다. 실제로 북한 시장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북한의 인권 향상, 민주적 제도의 도입·확산, 일반 주민의 복지 증진 등과도 연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남북경협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시장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